

	논 평		충남도당
2016년 10월 12일(수)		담 당 : 이영구 정책실장 대변인 : 박정현(010-3383-0068) 김 연(010-3355-4074)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81-2, 승지빌딩 5층 / 041-569-1500, 010-2390-6824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당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엄연한 충남도민의 땅”

헌법재판소는 13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 충남도와 아산시, 당진시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평택시 등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변론이다.

2015년 5월,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분쟁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당진항 매립지의 71%를 평택시에 귀속한 바 있다. 이 결정은 중앙집권적 사고에 기인한 결정으로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2004년 헌법재판소 관할 결정에도 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중분위 결정을 무효화 하기 위한 충남도와 범도민대책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대법원에 행정자치부장관 결정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만큼 논리와 법리개발 등 사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소송의 본질은 ‘충남도계 사수’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헌법에 보장

된 지방자치제도의 틀을 공고히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를 위해서 국회 차원의 공감대 확산과 해상 자치권(관할권) 법제화 등의 법률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